

언론산별노조, 어디까지 왔나

박강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1. 언론산별, 출범 눈앞

전국언론미디어노조(가칭)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언론노련은 산별노조 출범일을 예정대로라면 9월 22일, 약간 순연되더라도 11월 26일까지로 잡고 있다. '언론사 노조가 산별노조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지마'던 간부도 있었지만, 산별노조는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다. 독자들이 언론사노조를 어떻게 바라보든 언론산별을 추진한 당사자로서는 감개무량하고 들떠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올 가을에 출범할 언론산별은 무엇보다도 과기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앞선 동지들의 노력과 민주노총의 지난한 투쟁에 힘입은 바 크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어 산별노조 또한 우리는 빚지고 가는 셈이다. 언론사노조를 다시 세우고 언론개혁을 힘있게 전개하는 것, 그것이 그 동안의 빛을 갚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언론산별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은 올해 들어 시작했지만, 언론산별은 95년 방송단일노조 추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기에는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라 판단되어 조금은 긴 과정이지만

방송단일노조 추진에서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2. 방송단일노조 추진

1994년 5월 창립된 방송사노조협의회(방노협)는 그 해 착공한 목동 방송회관 입주 문제를 계기로 결성되었지만, 핵심적인 동인은 연맹 출범 초기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방송사노조간 연대기구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방노협은 연맹 방송특위를 흡수 운영하고, 매주 민심위 간사 모임을 정례화 했으며, 각종 방송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방송사노조간 연대활동을 강화해나갔다.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방노협은 1995년 1월 18일 한국방송노조건설준비위원회(방노위)를 결성했다. 교육방송을 강제로 KBS에 통합시키고 KBS 2TV를 분리시키려던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에 맞서 기업별노조의 협의체인 방노협을 해산하고 방송단일노조를 추진코자 했던 것이다.

방노위는 1995년 하반기 방송법 개악 저지투쟁, 1996년 상반기 MBC노조 파업과 총선활동을 거쳐 1996년 하반기에는 조합원 총투표 일정을 확정하였다. 관건은 KBS노조였다. 그러나 방송단일노조 건설을 막기 위한 KBS 사측의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것은 '전쟁에 닮아 아니었다'(11월 23일 '회사를 걱정하는 모임'이라는 괴문서를 시작으로, 11월

26일 '누구를 위한 단일노조인가', 11월 28일 단일노조를 막기 위한 350명 확대 간부회의, 11월 29일 '후배사원들에게'라는 부장단 명의의 성명서, 12월 2일 홍두표 사장 명의의 '전 사원에게 고합니다' 성명서 발표, 노동부장관에게 보낸 '투개표 참관을 위한 근로감독관 파견 요청', 12월 3일자 KBS주보 1~6면 기사 등 사측의 방해공작은 극에 달했다).

방송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94.4% 투표에 56%가 찬성함으로써 조건부 해산에 필요한 2/3를 넘지 못했다. 당시 투표율 94.4%는 이전 KBS노조가 실시한 아홉 차례의 조합원 총투표 투표율 평균 78%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노사 양측의 대결 정도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1996년 12월의 일이었다.

3. 산별건설 경로 - 대산별로

방송사노조가 방노협, 방노위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파업을 통해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벌인 반면, 신문사노조는 90년대 초반 이후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방송사노조의 왕성한 활동과 신문사노조의 침체라는 대비는 소유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방송노조를 주도한 KBS, MBC, EBS, CBS 등은 공적 소유구조이나 신문사는 대부분 개인 소유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지역 신문 통신사

노조는 방송단일노조 추진에 자극 받아, 1995년 10월 서울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서신노협, 15개 노조)를 발족시켰다. 서신노협은 1995년 들어 신문사간 무한경쟁이 촉발되고 근무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연맹이 8월 개최한 <신문무한경쟁토론회>와 9월 간부수련회에서 신문단일노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고, 주1회 휴무 증면 자체 요구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원 서명운동(3,500명), 신문협회장 면담 등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서신노협은 단위노조 집행부의 잦은 교체 등으로 신문단일노조를 추진하지는 못하였고, 신문사노조간 정보교류 및 상시적인 연대기구의 상설화라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후 연맹은 1997년 9월 제42차 중앙위원회에서 언론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산별기획단을 구성했다. 산별기획단은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소위를 두고 언론산별의 경로와 시기 등을 논의했는데, 1997년 11월 열린 산별기획단 2차 운영위원회에서 산별 건설 경로를 방송단일노조에서 언론산별노조로 정리하고 소산별노조가 아닌 연맹 산하노조를 하나로 묶는 대산별노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97년 11월 산별기획단에서 결정했던 조건부 합병 결의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홍보 부족에 따른 조합원들의 인식 부족, 이형모 연맹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뒤로 미뤄졌다.

4. 산별 결혼식 날짜 잡아

IMF 구제 금융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기업 내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만을 다루던 기업별노조의 실력으로는 고용이나 구조조정, 사회적 복지 문제는 기업 밖의 사안이었다. 언론 종사자 8천명이 잘려나가고 노조는 속수무책이었다. 심한 경우, 조합원들의 정리해고를 용인해주는 대가로 특과원으로 나가는 기업별노조 위원장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노조로는 힘들다는 것을 체득해갔다.

1998년 11월 언론연맹 제15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산별노조 관련 주요한 결정사항 및 지침을 의결했다. 언론산별노조 건설 시기를 2000년 11월 26일로 확정하고, '조합비 총액 1% 및 단위노조 집행부 임기 2년 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건설, 단위노조 강화를 위한 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서 1999년 4월 산별노조추진위원회(산별추진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별추진위는 방송회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산별노조 건설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및 단위노조 순회간담회,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미디어오늘』에 '산별노조로 가는 길'을 석 달 간 연재해 대중적 토대 구축

에 주력했다.

1999년 11월 열린 제16차 정기 대의원대회는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투표 일정과 산별노조 창립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산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2000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산별노조 창립 시기를 2000년 9월 22일로 못박았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연맹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산별노조 사업으로 집중되었다. 『언론산별노조』라는 단행본이 연맹 총서로 출간되었고, 『미디어오늘』의 발간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던 『언론노보』가 2000년 3월 22일 정식 복간되었다. 산별수련회와 단위노조 순회간담회, 교육이 이어졌다. 포스터와 브로셔, 문답집, 산별수첩을 비롯한 홍보물이 집중 제작·배포되었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동반대회도 개최되었다.

5. 산별투표, 압도적 찬성

2000년 5월 29일부터 KBS노조, 부산일보노조가, 5월 31일부터는 스포츠조선노조가 조합원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 밖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부산일보노조는 조합원 259명 중 214명이 투표에 참여(83%)해 202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94%라는 절대적 지지를 확인했다.

KBS노조 또한 전체 조합원 4,727명 중 4,066명이 투표에 참여(86%)해 3,335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82%를 기록했다. 특히 KBS노조 조합원이 보낸 찬성률은 노조 집행부와 산별추진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었다.

이어서 한겨레노조, 대한매일노조, YTN노조, 경향신문노조, 국민일보노조, 연합뉴스노조가 평균 90%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변경 투표를 마쳤다. 7월말 현재 14개 노조 7,794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9월말까지는 90%이상의 단위노조와 조합원들이 무난히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연맹 소속노조 70개, 조합원 17,000명. 규모 있는 노조는 대부분 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노조는 8월 말 9월 초에 집중적으로 투표를 예정하고 있음).

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과 언론노련에 대한 지지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단일노조 추진 경험, IMF를 거치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기업별노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대세를 따르는 언론종사자의 정서 등이 높은 찬성률을 가능케 했다.

6. 과제와 전망

2000년 9월 출범하는 (가칭)전국언론미디어노조는 완성된 산별노조가 아니

1) 조직대상과 조합비 문제에 대해 부분적인 쟁점이 있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만장일치인 대규모 노조의 기록권 문제 역시 크게 기술될 부리진 않았다.

다. 언론산별추진위가 제시한 규약(안)은 느슨한 형태의 과도기적인 안으로 볼 수 있다.¹⁾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연합에 가깝다. 재정과 인력의 중앙 집중은 부분적이며(지부 7, 중앙 3) 교섭 역시 당분간 기업 단위 교섭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조직체계상 단위노조 전체를 지부로 편제함으로써 '산별노조-지역본부(광역)-지역지부' 체계는 장기과제로 넘겼다. 종업원 의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칭)전국언론미디어노조의 출범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비록 느슨한 형태의 산별노조이지만, 산별노조가 갖는 위력과 영향력은 기업별노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부분적이지만 사람과 돈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산별노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기존 기업별노조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운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교섭 체결권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악성 사업장이나 전략적인 사업장에 언제나 직접

집중 개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는 그 동안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장과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언론개혁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죽고 죽이는 언론산업의 파행적인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출범 초기가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2002년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기업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이는 노조의 존립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단순한 직능별노조와 어용노조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자간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언론산별노조가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잡을 때, 이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다. 힘 있는 언론산별노조의 출범, 여기서 언론노동운동의 미래는 판가름날 것이다. 산별노조는 이제 시작이다. ❖